

“마로해역 어업권 포기 없다”...해남군, 어민 총력 지원

어장사용 민사소송 항소 지원 현재 권한쟁의심판도 제기

해남군이 마로(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등 어민 생존권 보호에 나선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민사소송 항소 지원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어민 생존권 보호에 굳건 역할을 집적하기로 했다.

마로해역은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에 위치해 있다.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수역이 80%, 해남수역은 20%를 차지한다

이 곳은 해남 어민들이 지난 1982년부터 김 양식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1994년 진도군수가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분쟁으로 번졌다.

그 동안 수차례 중재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해 해남어민들이 어업권 10년 유효기간 종료 앞두고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따

르기로 극적 합의했으나 최근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진도군의 승소로 끝나면서 해남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민사부는 최근 “원고(해남수협·어민)는 피고(진도수협)에게 어장을 인도하고 김 양식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수협 측은 “이번 판결이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남군이 항구 어민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반복되는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앞서 지난해 10월28일 “진도군과의 관할 해상 경계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상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내용은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다.

최근 현재 판례(2010헌라2, 2016헌라8)에도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잘 나타나



지난해 9월10일 진도군 마로해역에서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어업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독자 제공>

있어 해남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해남군은 해양수산과 내에 마로해역대응담당팀을 신설하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다수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10년마다 반복되는 분쟁 및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서로 간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구례 휴·폐업 소상공인들 “4차 재난지원금 달라”

3차제 제외...제주도는 자체 지원 소상공인 700곳 중 100곳 휴폐업

코로나19로 휴·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구례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700여곳 가운데 100여곳이 휴·폐업 상태다.

구례읍에서 20년 넘게 자영업을 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12월 세무서에 휴업을 신청한 60대 A씨는 이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 신고를 했다.

지난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휴·폐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제외돼 A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근근히 버티다가 휴업했는데 더 이상 가

망이 보이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됐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휴·폐업자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휴·폐업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A씨처럼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전국적으로 3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지역은 이보다 낮은 15% 가량이 휴·폐업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선 구례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구례지역 700여 회원 중 15%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휴·폐업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제도’를 마련. 자체적으로 휴·폐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했다.

/구례=이진백 기자 lit@kwangju.co.kr

“전남도 농어민수당 120만원으로 증액을”

구충곤 화순군수, 시장군수협서

구충곤 화순군수가 현행 60만원인 전남도 농어민수당을 12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구 군수는 지난 19일 비대면으로 열린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액 증액을 건의했다.

구 군수는 “지난해 저온 피해, 수해 등 자연재난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농어가의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농업인원이 제외된 점 등을 거론하며 농어민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일선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 농어민수당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점도 고려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는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2019년 10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전남도 농어민수당 조례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구례 산수유꽃·장성 봄꽃축제 코로나 확산 우려 올해도 취소

지역 대표 봄꽃 축제인 구례 산수유꽃축제와 장성 봄꽃축제가 코로나19에 따라 올해도 취소됐다. 구례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도 구례산수유꽃축제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례군은 축제는 취소했지만 산수유꽃이 만개하면 산촌객들의 발길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산수유꽃 군락지와 산수유문화관 입구 등에 방역초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산수유 최대 군락지인 구례에서는 매년 3월 구례산수유꽃축제가 개최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21년 축제가 모두 취소됐다.

장성군은 오는 4월 ‘빈센트의 봄 축제’와 5월 ‘장성 황룡강 흥(洪) 길동무 꽃길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홍길동무 꽃길축제는 20년 역사의 흥길동 축제에 황룡강 꽃길을 더해 지난 2019년 5월 장성군이 새롭게 선보인 축제다.

‘빈센트의 봄’은 매년 4월 장성역 광장과 장성공원 일원을 무대로 열어온 소규모 봄꽃축제이다.

장성군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고, 감염 확산세가 잦아들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축제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 대로 급증하자 전격 취소했다.

/구례=이진백 기자 lit@

/장성=임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여풍당당’ 목포해경

경비계장·상황실장 등 주요 보직에 여성 배치

목포해양경찰서 주요 보직에 여자경찰관이 배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정기 인사에서 개서 이래 첫 여성 경비계장(경감 이공자)과 상황실장(경감 김나숙)이 임명됐다.

안전관리계장, 경비계장, 예방지도계장 등 경감급 주요 보직에도 여성이 배치됐다.

남자경찰관의 보직으로만 여겨지던 경비계장·상황실장에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업무적 전문성과 더불어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빈틈없는 해상治安 확보에 크게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해경 여직원들은 총 71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10%다. 이 중 65%에 해당하는 45명의 여성이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공자 경비계장은 “처음 맡은 경비계장이라는 직책에 어깨가 무겁지만,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행히 후배 경찰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임재수 목포해경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급너의 벽을 허물고 일과 가정이 안정적으로 양립하는 조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해양경찰서 개서 이래 첫 여성 경비계장과 상황실장을 배출하는 등 목포해경 여자경찰관들이 약진했다. <목포해경 제공>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앱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2020타경 4769	1	목포시 원산동1로87, 310동 5층 503호 [연산동, 연산주공3단지아파트] 59.99㎡	[아파트]	93,000,000	우선하이빌 '8동'
2020타경 5144	1	목포시 옥암로177-1, 5층 510호 [석현동, 에드기안빌] 21.4513㎡	[아파트]	81,000,000	
2020타경 5649	1	목포시 하당로14, 109동 4층 404호 [상동, 공동산신안아파트] 84.92㎡	[아파트]	140,000,000	
2020타경 54634	1	목포시 원산로138, 1층 101호 74.82㎡ [대지권·목적인도차의 표시의지목적이나이용제한없음]	[다세대/빌라]	74,500,000	우선하이빌 '8동'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2018타경 52550	1	영암군 서호면 용현리 94-9 900㎡	[답]	23,955,4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4899	1	신안군 광-10 1454㎡	[전]	23,955,4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106	1	목포시 원산동 연리 902 46㎡ [현황부속토지(주목부지)로이용중, 상수도시설(계량기)향, 수도꼭지], 오수관로, 쓰레기및쓰각구가소제]	[전]	2,35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일부도로변에의한접도구역지침
2020타경 5489	1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1176-1 1918㎡ [타지권·목적인도차의 표시의지목적이나이용제한없음]	[전]	72,88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일부도로변에의한접도구역지침
2020타경 5526	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97-1 1332㎡	[답]	131,86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3914	1	무안군 일로동 의산리 139-3 788㎡ [현황타지권·목적인도차의 표시의지목적이나이용제한없음]	[전]	26,79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무안군 해제면 유원리 255-14 959㎡ [2필지, 료나부락각타지권과일단지권으로이용중으로필요시측량등에의거별도확인요]	[전]	15,34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2020타경 53914	3	무안군 온남면 연리 1391-10 2228㎡ [공유자할양분지본905/2228,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1,720,000	지분매각, 공유자우선구매권행사제한
2020타경 53983	1	목포시 대양동 26 25091㎡ [공유자한인복지분1/9전부, 토지중립부활합의서제출, 정책한지책경제현황등필요시별도확인요]	[일야]	38,751,671	지분매각, 공유자우선구매권행사제한
2020타경 54061	1	무안군 상황동 남곡리 909-16 1963.0㎡ [일야] 집지 및 경계구분없는소규모임대주택확장허위취득및경계확인위해서별도확인요]	[일야]	29,546,700	연고자미상분요수, 29,546,700
2020타경 54160	1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산118 1785㎡ [공유자한전도지분1/2전부]	[답]	4,016,250	지분매각공유자우선구매권행사제한
2020타경 54696	1	신안군 안좌면 마평리 782-1 2334.1㎡	[답]	30,343,3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4870	1	무안군 물탄면 봉산리 산53-4 1636㎡ [공유자지분1/3전부]	[일야]	1,308,720	지분매각공유자우선구매권행사제한
2020타경 5021	1	무안군 상황동 남곡리 산118 1785㎡ [공유자한전도지분1/2전부]	[상가/오피스]	393,000,000	393,000,000
2020타경 54399	1	무안군 상황동 남곡리 산118 1785㎡ [공유자한전도지분1/2전부]	[상가/오피스]	106,000,000	106,00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2020타경 3735	1	함평군 순물면 산남리 1031 1887㎡ [현황목조주택, 비닐하우스부지, 일부지상동물] 및매각대상이내파조비닐하우스구조체 [700㎡] 이상지]	[전]	494,977,400	일괄매각, 기계기외전매출, 제시외건물중장기투자상제외건물(가산제외건물), [다용도실및창고], [C][보일러실], [C][창고및기계실]매각포함, 제시외건물(비닐하우스구조체등)매각제외, 목적7원확정
2020타경 4820	1	함평군 순물면 북동길 47-10 98.57㎡ [제시외, 비닐하우스 3㎡, 기계기구목적지]	[양여장]	84,815,580	일괄매각, 목적7원확정
2020타경 53891	1	함평군 순물면 산남리 2345-4 700㎡ [제시외, 비닐하우스 3㎡, 기계기구목적지]	[양여장]	1,972,751,360	일괄매각, 기계기외전매출, 제시외건물중장기투자상제외건물(가산제외건물), [다용도실및창고], [C][보일러실], [C][창고및기계실]매각포함, 제시외건물(비닐하우스구조체등)매각제외, 목적7원확정
		무안군 현경면 가평리 39 598㎡ [현황일부도로, 일부부지부지, 빈비사 [190.75㎡] 소재]	[전]	84,815,580	일괄매각, 목적7원확정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1176-1 1918㎡ [타지권·목적인도차의 표시의지목적이나이용제한없음]	[전]	72,88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일부도로변에의한접도구역지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97-1 1332㎡	[답]	131,86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무안군 일로동 의산리 139-3 788㎡ [현황타지권·목적인도차의 표시의지목적이나이용제한없음]	[전]	26,79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무안군 해제면 유원리 255-14 959㎡ [2필지, 료나부락각타지권과일단지권으로이용중으로필요시측량등에의거별도확인요]	[전]	15,34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공고된 부동산의 연락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특별매각조건
 - 농지매각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대상기밀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변상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변경신청 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 공유자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집행되는 매각일에는 매수비용의 미납으로 인하여 매수비용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은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일에는 매수 매수비용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밀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구매신고로 한다.
 - 매각기일 : 2021. 3. 8. [월] 10:00
 - 매각결정기일 : 2021. 3. 15. [월] 16:00
 -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법 제101호 경매법정
- 입찰방식에 비한 기밀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낙찰여부 보증금을 함께 일괄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 [미리반트]에 해당하는 공금기금 발행의 자기입찰 또는 현금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제출한 문서[양행 보증서]를 준비하여 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계약에 각각의 자금을 영회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봉투의 부인이 완료되면 관공로 개봉할 수 있으며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중 가장 높은 가격자를 우선으로 한다.
-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비용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이 확정된 다음날까지 매각허가 대상 매각대금 납부여부 확인한다. 대금지급기한 종료 매각결정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한다. 다만, 매각결정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만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비변금 납부한 대금납부서 유예한다. 미납시 매각허가 실시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 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유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종전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기입유등 말소처리를 위해서는 등기부와 지상권소재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등기부상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이 된 등기부상 확인하여야 한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유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종전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기입유등 말소처리를 위해서는 등기부와 지상권소재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등기부상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이 된 등기부상 확인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매수인에게 제공된 서류는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 입찰결과에 따라 매각대금의 지급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매수인에게 제공된 서류는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 매각대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동일한 최고 매각대상기밀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된다. 단, 동지역확실향조사 등 여의치 않을 경우 매각대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명할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 공고된 물건에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 신뢰에 공고를 받은 후 매각대금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면서 무리반행 계산과 공고나 법원에 비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한다.
- 매각결과 공고의 효력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신청서] → [입찰]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 및 입찰 신청서 작성은 법원공고 홈페이지에서 또는 법원공고 홈페이지에 방문 가능합니다. 특히 그 밖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매각대금 산입없이 하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승계신청의 경우를 할 수 없으므로, 관공로에 관여하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계시한 매각대금의 공고나 비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